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425~425p	해설	헌법 2021년 법원직 9급 한눈에 알아보기 <table><tr><td>01</td><td>02</td><td>03</td><td>04</td><td>05</td><td>06</td><td>07</td><td>08</td><td>09</td><td>10</td></tr><tr><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r><tr><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r><tr><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r><tr><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td><td></td><td></td><td></td><td></td></tr><tr><td>0</td><td>0</td><td>0</td><td>0</td><td>0</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01 년도 *** 02 년도 *** ③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표현에 대하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명확성의 원칙, 검열 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 등도 적용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하여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유통목적이 없는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음란물출판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합헌성 심사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볼 것인바,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헌재 1998. 4.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0-341)을 변경한다(헌재 2009.5.28. 2006헌바109 등)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0	0	0	0	0	0	0	0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	0	0	0	0	0	0	0	0	0	21	22	23	24	25						0	0	0	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0	0	0	0	0	0	0	0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	0	0	0	0	0	0	0	0	0																																																						
21	22	23	24	25																																																											
0	0	0	0	0																																																											
430p	해설	20 년도 *** 21 년도 *** 22 년도 *** 23 년도 *** 24 년도 *** 25 년도 *** 26 년도 *** 27 년도 *** 28 년도 *** 29 년도 *** 30 년도 *** 31 년도 *** 32 년도 *** 33 년도 *** 34 년도 *** 35 년도 *** 36 년도 *** 37 년도 *** 38 년도 *** 39 년도 *** 40 년도 *** 41 년도 *** 42 년도 *** 43 년도 *** 44 년도 *** 45 년도 *** 46 년도 *** 47 년도 *** 48 년도 *** 49 년도 *** 50 년도 *** 51 년도 *** 52 년도 *** 53 년도 *** 54 년도 *** 55 년도 *** 56 년도 *** 57 년도 *** 58 년도 *** 59 년도 *** 60 년도 *** 61 년도 *** 62 년도 *** 63 년도 *** 64 년도 *** 65 년도 *** 66 년도 *** 67 년도 *** 68 년도 *** 69 년도 *** 70 년도 *** 71 년도 *** 72 년도 *** 73 년도 *** 74 년도 *** 75 년도 *** 76 년도 *** 77 년도 *** 78 년도 *** 79 년도 *** 80 년도 *** 81 년도 *** 82 년도 *** 83 년도 *** 84 년도 *** 85 년도 *** 86 년도 *** 87 년도 *** 88 년도 *** 89 년도 *** 90 년도 *** 91 년도 *** 92 년도 *** 93 년도 *** 94 년도 *** 95 년도 *** 96 년도 *** 97 년도 *** 98 년도 *** 99 년도 *** 100 년도 *** ②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재청구기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 자체에 해당하고 위 재청구한 재심사건에서의 재판지연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9. 7. 14. 2009헌마332).																																																													

[illegible]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